

'90년대 에너지정책 발전의 방향

李 會 晟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 자료는 지난 1월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에너지자원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이며, 이는 국내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아래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 외중에 두차레에 걸쳐 油價 파동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일치(컨센서스)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油價 파동기간 중 그 파급효과가 너무나 심각하였던 나머지 에너지정책의 기초를 단순히 위기관리의 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오류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에너지자원은 수급시장의 속성상 일반상품과는 분명히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또한 전문성을 띠게되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포괄성과 다양성 그리고 복합성을 띠게 된다. 여기에 에너지정책이 국가경제사회 운용에 있어 전술적 뿐만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된다.

금세기의 마지막 연대이며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단 요즘 부각되는 새로운 제 3의 石油危機說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고도산업화,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추구 등으로 부터 오는 정치·경제·사회적 정책과제의 전문분야에 걸쳐 에너지정책이 수용, 담당, 처리해야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이용과 관련되어 크게 부각되어 있는 환경 공해문제, 입지선정에 따른 국토이용 관리문제 등은 에너지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숙명적 과제인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어려웠던 지난 '80년대를 지내며 우리나라는 정책운용의 전문적 '노하우(Know-how)'의 축적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정책분야에 많은 성장을 해왔으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원숙하게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재조명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소비가 매 10년만

다 2 배씩 증가하는 등, 급격히 팽창하여 왔다. 특히, '70년대에 에너지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유가파동으로 인하여 에너지에 대한 국민경제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정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8년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전담부서인 動力資源部를 설치한 바 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과거의 석유, 석탄, 전기 등 각 에너지원에 대한 개별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에너지원 간의 수급균형을 조정·유지하며 에너지 절약정책 등을 통하여 수요를 관리하고,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거시적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정책은 총자원 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범주 내에서, 경제·사회적 목적의 가치에 따라 이용되는 자원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에너지 개발·생산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만 국한될 수 없으며, 국가 경제의 총자원 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표와 수단이 선택되어야 하고, 정책의 운용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 되어져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수급정책, 투자정책, 유통정책, 절약정책, 자원개발정책, 안전관리정책, R&D 정책, 환경보호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책수단의 특성에 따라서는 가격 및 조세정책, 재정투융자 및 지원금정책, 규제정책, 비축정책, 기금관리정책 및 공기업관리정책, 대외협력정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정책들은 기능상 각기 특성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정책의 파급효과와 실행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도 거시적 에너지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에너지정책은 다양성 뿐만 아니라, 정책의 대상과 기능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포괄성과 특수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에너지정책이 간여하게 되는 시장의 범위가 에너지부문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건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며, 또한 에너지자원 시장구조의 성격이 특수하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시장의 특징으로서 우리는 우선 공급부문에서의 제한성과 생산지의 지리적 편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에너지자원의 수급시장은

다른 상품에 비하여 비교적 불안정하며, 특히, 석유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수급구조의 구축을 위하여 비교적 공급제한성이 약한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소비구조의 다원화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에너지원의 수급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포괄적이고 전문성을 띤 에너지정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또한 항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부문에는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가격급등 및 공급중단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외에도 외부요인의 개입, 원전사고나 전쟁과 같은 돌발적인 사건, 그리고 급격한 기술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불확실성의 악성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축정책과 기금운용과 같은 위기관리 정책과 그리고 안전관리강화 등의 대응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예방적 정책운용이 필요하며, 궁극적인 측면에서 기술향상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반적으로 에너지부문은 정부의 산업 및 시장관리의 필요성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 또한 에너지의 생산·공급 단위가 다른 일반상품에 비하여 상당히 자본·기술 집약적이고, 대규모이며, 독과점 형태의 비경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 및 개발이 장기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 및 투자, 공기업 등의 시장관리를 정책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실행되어야 하는 장기성의 동태적 특징도 가지게 된다.

에너지자원의 빈곤국인 우리나라에 있어 에너지의 경제적 안정공급 못지 않게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이다.

일차적으로 수요관리정책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정책과 직결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소비부문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적인 에너지소비구조 전환정책도 이 범주에 포함되

어야 한다. 절약정책에 대한 정책수단으로는 에너지이용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금 및 재정적 용자제도 설치, 조세감면제도,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 형태로서 에너지관리기구 설치 및 규제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생산공정, 도로, 주거 환경개선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경제·사회적 여건 조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수급관리정책은 에너지 소비단위에만 국한될 수 없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에너지절약정책은 에너지수급구조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입소요량은 물론 에너지공급 투자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경제가 갖는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또한 환경공해를 줄이는 등, 국민경제·사회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지난 1980년대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인 장기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에너지절약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구조의 공급부문의 제약조건 및 불확실성 등으로 부터 오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소비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공급과 수요의 양 부문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급부문에서는 에너지 수입공급선에 대하여 지리적인 다원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脫石油政策에 의하여 석탄 및 천연가스 등 석유대체 에너지의 사용이 증대되었으며 원자력발전이 확대되는 다원화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수요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에너지이용기술의 향상 및 효율성제고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절약투자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석유비축사업, 석유사업 기금의 징수 및 운용, 국내의 자원 탐사 및 개발투자 등의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정책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떠나 정책적 의지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다.

최근 에너지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환경보호문제와 입지선정의 문제이다.

에너지사용과 환경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사용도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유발

하게 된다. 신탄의 사용은 산림자원을 파괴하며,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사용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원자력의 이용은 방사능오염의 가능성과 폐기물 처리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수력의 이용은 침수지역의 발생으로 인하여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이중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파괴문제로서 국지적으로 볼 때는 대도시의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에 국한되고 있지만,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석유와 석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에 누적되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켜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소위 온실효과의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더우기 화석연료의 사용은 산성비를 유발하여 식수와 농작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산림을 황폐화시켜 결과적으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어 온실효과를 순환적으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온실효과의 가설은 현재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기상학자, 지구물리학자, 생태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관측자료들을 제시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입지선정의 문제도 이와 같은 환경·공해 문제와 직결되고 있으며,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당 주민들의 주거·복지문제와도 연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을 다루는데 있어 환경문제는 대기오염의 해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복지次元에서 중요하게 거론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정책이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분야에 까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정책이 공급부문에 주로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향후의 에너지정책은 수요부문과 환경문제와 같은 분야에 대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제반조건을 능동적으로 갖추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에너지시장구조와 정책수립에 대하여 또다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정책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3. 1990년대의 에너지정책 방향

'80년대의 우리의 경험은 '90년대의 에너지정책이 새로

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을 여러 측면에서 암시하고 있다. 이미 국내외 여러 여건의 변화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듯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세계의 정치·경제구도는 지역중심으로 <블럭>화 되어 가고 있으며 (EC통합,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ASEAN 등), 동구권의 개방화에 따라 冷戰體制는 崩壞되어 가고, 우리나라는 北方外交의 활성화 등으로 국제적 정치경제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화 추세와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의 확대 도입 등이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부각되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80년대 말 이후 육구의 다양화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정치·경제적 민주화 추세가 결실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율화가 각 분야에 확산될 것이며, 개방화에 따른 국제화 추세도 더욱 증대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될 '90년대를 생각하며, 우리는 예상되는 기술·정보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된 통신·정보기술은 더욱 가속력을 갖고 발전되어 확산될 것이며,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개발은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의 집약도를 증진시킬 것이며, 산업구조와 경제활동의 양상을 새로운 구도로 전환시킬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환경문제 역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과제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폭되어 가리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들이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 함축적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은 '90년대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될 에너지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 이러한 주변의 여건변화 속에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정책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의 개념은 과거로부터 탈피를 뜻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으로부터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제개발과정 중의 목표달성 위주의 정책 (Fixed target policy)이었다면, '90년대의 정책은 신축적 목표지향의 정책 (Flexible target policy)으로 발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고도의 전문적 운용으로 원숙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은 정책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다. 실효성있는 정책이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책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개념의 정책이어야 한다.

4. 1990년대의 에너지정책 과제

'90년대의 세계 에너지시장의 여건은 석유시장을 중심으로 불안한 요인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제 3의 石油危機說은 일면 타당한 이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90년대의 油價 상승의 전망에 대한 근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첫째, '90년대 전반기부터 OPEC의 시장독점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非OPEC 산유국들의 많은 유전들이 머지않아 한계유전에 도달할 것이고, 또한 국내 경제개발로 자체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수출 공급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80년대 후반기부터 세계의 석유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의 파잉생산이 이제 거의 소진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 이외에도 우리는 산유국들이 원유자체의 수출 보다는 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원유가공 석유제품수출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러 이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90년대에 石油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 3의 石油危機說에 대하여 우리가 신중하게 유념해야 할 사항은 그것이 과연 1, 2차 석유위기와 같이 단시일 내의 가격폭등과 공급중단을 수반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OPEC가 2차위기시의 愚를 재현 시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OPEC의 석유가격은 非OPEC 산유국의 원유 개발·생산비의 상승률에 따라 원만하게 오를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20년 간의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볼 때 이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이용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 에너지원들은 OPEC 산 석유에 대하여 경쟁자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 물론 예측불허의 돌발사태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돌발사태로 인하여 유가의 기본구조가 장기간

왜곡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돌발사태의 위험까지 시장의 기능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예: 원유비축)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90년대의 석유위기는 가격폭등의 위험보다는 가격과 석유의존도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의 증가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때 세계의 석유 시장은 소수의 대규모 산유국의 장기전략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며, 특히 주요 소비국의 원자력·환경문제 등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전 세계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생산이 전무한 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90년대에는 과도한 石油의존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천연가스 등 석유 대체에너지의 시장력이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90년대의 세계에너지 시장여건 변화중 가장 주의깊게 주목할 또 다른 사항은 석유의 주요매장·생산지의 지리적 분포가 中東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에 집중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하여 온 석유수입원 다변화정책의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우리나라가 석유수입원으로 개발한 동남아 지역의 산유국들(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석유매장·생산능력이 '90년대에 들어 크게 열악하여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90년대에는 中東지역의 石油輸入先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전략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잠정)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량은 현재보다 최소한 두배 정도 증가될 전망이다. 그 증가폭은 과거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의 증가분에 상응하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불가피할 것이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일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여러선진국들의 수준을 크게 밑도는 사실로 볼 때에도 (日本の60%, 미국의 20%),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너지수요 증가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나라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특히 안정적인 공급기반구축과 수요관리정책은 우리나라가 '90년대에도 연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 에너지 政策目標이다. 앞으로 에너지수요가 산업과 수송부문에 의하여 주도될 전망이므로, 이 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절약정책의 필요성이 특히 부각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구조는 양적인 팽창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인 가스와 전력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반면 무연탄 수요의 감소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또한, '90년대에 예상되는 고도의 정보화와 산업자동화의 증가추세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요구할 것이다. 가정·산업 부문에서 난방용 에너지 소비구조는 가스의 이용확대와 함께, 집단 에너지 공급의 확대로 점차 지역난방 체계로 발전되어 갈 것이며, 소득증대로 인하여 문화용·냉방용·편의용(Home Automation 같은 것) 에너지 수요는 전력을 중심으로 증대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은 '90년대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과제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전력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90년대에는 發電설비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환경문제로 인하여 저공해형 발전형태인 원자력과 가스발전의 역할이 강조되리라 예견된다. 그러나 원자력의 이용증대에 대하여 입지선정과 핵폐기물 처리문제, 원전의 기술, 경제적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여론이 증대될 것이며, 原電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원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문제 및 투자증대에 대한 경제성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이외에도 '90년대의 電力부문의 정책과제는 산적되어 있다. 정보화와 고도산업화 추세에 합당한 高品質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정전 방지와 주파수 및 전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공급체제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진전에 부합하는 지역단위의 전력수급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수요지에 근접한 위치에 지역난방을 겸용한 熱併合發電의 도입을 통한 分散型 電源開發은 입지난 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완화로 송배전설비투자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90년대에는 電力産業組織의 합리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증대되어야 한다. 발전 부문의 경쟁을 허용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적정규제체도를 확립하여 독점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 산업조직에 대해서도 신중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의 국내석유시장에서는 수요량의 증가와 함께 환경문제로 인한 제품간 수급불균형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요인이 석유제품가격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나, 이는 수급불균형의 압박을 극복하여야 할 문제를 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증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 소모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품 간의 가격경쟁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효율의 개선과, 보다 바람직한 소비자의 선택, 그리고 제품간의 배분의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석유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민감한 부분이므로 기금운용, 관세정책 등에 대한 경제적 실효성의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시장의 기능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가스 부문의 '90년대의 정책과제로는 정유시설 확장, 송유관 및 배관망 확충 및 운용, 비축시설의 증대,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비롯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의 개선,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반문제가 있다.

과거에 가정·산업의 주종연료이던 연탄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석탄산업 정책도 '90년대에는 무연탄의 과잉생산 공급에 따른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무연탄의 국내생산과 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부문에서는 비경제탄광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관련된 대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며, 수요부문에서는 무연탄 발전소의 건설, 유·무연탄의 혼소 및 겸용발전소 건설, 시멘트 산업에서의 이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수급의 안정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석탄 생산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에너지자급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장기개발 가능 탄광을 육성하고 기계화를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유통 및 가격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관리와 복지향상 측면에서 연탄공장 공해방지 강화와 산탄지의 환경개선, 진폐환자 예방책, 이직자 대책 및 재해감소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점차 서민연료인 연탄의 공급안정화 방안을 위해서 극빈 연탄사용가구의 보호와 취약지역에 대한 안정적 공급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지방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新·再生에너지 이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에너지수급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수력,

풍력, 조력, 태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이 지방단위의 에너지수급계획과 투자계획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 및 산업폐기물의 이용은 지역단위의 熱併合發電 및 지역난방에 크게 기여하며, 폐기물 공해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구발전과 투자 및 지원정책은 국가적 차원과 지방단위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소비 증가함에 따라 '90년대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고양될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청정 에너지원의 선택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低公害型 에너지수급구조의 형성에 에너지정책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부문에서의 유연탄 이용 확대는 입지문제와 함께 제약받게 될 것이다. 수송용에너지는 현재 유통위주의 소비구조에서 LPG와 CNG 등 저공해 가스연료 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유부문에서는 脫黃施設의 투자비용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는 등 환경문제로 인한 에너지가격 구조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환경규제 및 관리의 강화와 저공해형 에너지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대한 에너지정책의 기능이 특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간 또는 국제협력 정책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어갈 것이며, 주변국가와 산성비, 분진의 이동 등에 대한 정책적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고, 온실효과 방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국제적 압력을 통하여 부각될 것이다.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필히 유연탄 및 원자력발전소와 저탄지의 입지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며 이는 해당 주민들의 주거문제와 직결되어 더욱 증폭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지방화 과제가 입지문제와 함께 대두될 것이며 이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책과제로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5.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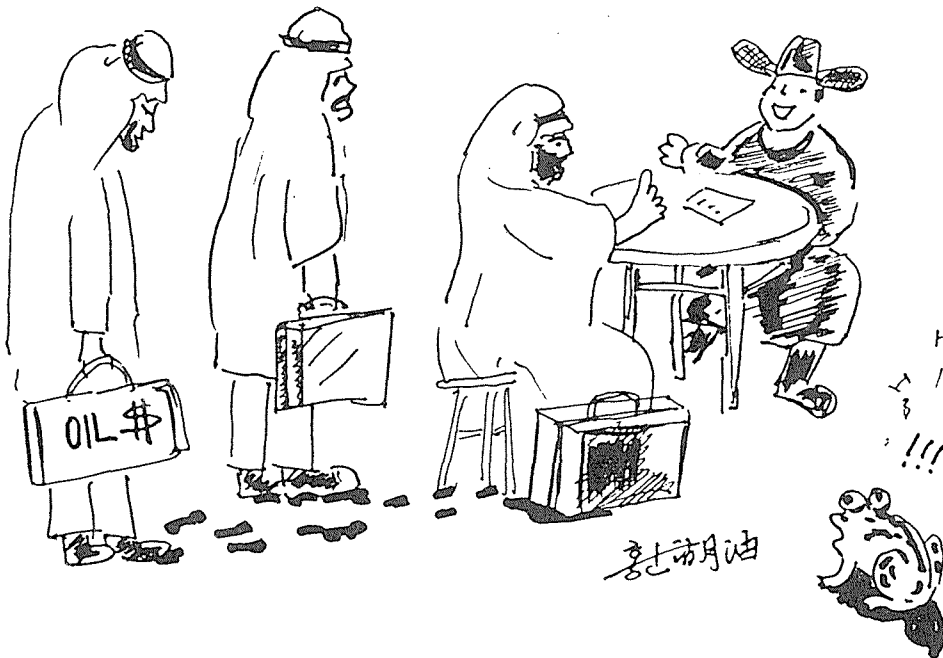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90년대는 에너지정책에 있어 분명 새로운 도전의 시대이다. 환경 및 입지문제의 제약

조건을 극복해야 하며,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산업화, 복지화 등과 관련하여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여 있다. 이에 부합되게 에너지정책은 발전되어야 하며 전문성의 심도를 깊게하여야 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에너지정책의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정책구조의 제도적 보완 및 조정, 전문적인 행정·연구 인력의 양성 및 지원확대, 산·연·관의 유기적 협동체

제 확장, 정보의 관리 및 분석체제 강화 등 정책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複合에너지 시대로 전개될 '90년대의 에너지정책의 성패는 21세기의 우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에너지문제는 어느 한 시대의 특정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구 전체 그리고 후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석유만경

산유국 석유장관 잇단 방한



야,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